

결과보고서 요약

사업기관	아시아개발연구소		
사업명	지속적 평화를 위한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구민교	행정대학원	교수
사업기간	2020.3.1.~2021.1.31	사업비	

1. 사업 목적

- 향후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를 대비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세부화 작업을 시행함.

2. 사업 내용

- 남북 해양협력 방안, 취약국 및 분쟁지역 보건의료체계 강화 방안, 한반도 내 글로벌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체제의 구축 가능성, 북한의 ‘발전권’ 증진에 기여하는 인도·개발협력 추진방안, 향후 정전협정 체제의 극복을 위한 평화협정 발전방안, 생애초기 질병과 같은 부정적 경험이 개인의 장기적 인적자본 축적과 생애주기 건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의 북한모델 적용 가능성 등을 모색함.

3. 사업 성과

- 각 연구진 연구 내용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 평화를 위한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이라는 틀 속에서 각 각론 연구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또 앞으로의 연구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음.
-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조만간 각 개별 연구의 학술지 논문 투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이후 최종 연구성과를 모아 단행본을 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음.

아시아개발연구소

1. 사업 배경

□ 개요

- 사업명: 지속적 평화를 위한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 기관명: 아시아개발연구소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한반도에서의 지속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보와 같은 상위정치(high politics) 분야뿐만 아니라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분야와 같은 하위정치(low politics)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
- 목적
 - 현재 지속적 평화를 위한 대북 협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데는 5·24 조치와 유엔의 대북제재가 장애물로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2018년 이후 일련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 및 개발협력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를 대비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세부화 작업을 시행함.

2. 사업 내용

□ 사업 추진 내용

- 해양협력은 남과 북이 동반성장하고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 중 하나이며, 본 연구는 남북한 해양협력을 위한 상호 법제의 이해, 자원 이용과 절차, 안보적 요소 등과의 연계 해석, 북한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방향 등을 제시함.
- 취약국 및 분쟁지역 보건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속적 평

화를 위한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 한반도 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체제의 구축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
- 북한의 ‘발전권’ 증진에 기여하는 인도·개발협력 추진방안을 모색함.
- 지속적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의 역할과 조건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를 망라하고 체계적인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전협정 체제의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생애초기에 겪는 질병과 같은 부정적 경험이 장기적으로 개인의 인적자본 축적과 생애주기 건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북한에 확장하여 적용·분석함.
- 코로나시대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함.
- 현실주의적 접근과 규범주의적 접근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속적 평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발전방향을 모색함.

□ 일정별 추진 사항

일 정	추진 내용
2020.3.1. - 2020.6.30.	연구 일정 및 계획 공유, 연구진별 기초연구 진행
2020.6.25.	참여연구진 연구 중간 발표회 (호암교수회관)
2020.11.27.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연구결과 발표회 세션 구성 및 발표 (Zoom 화상회의)

□ 참여 인력

- 책임자

성명	대학	학과	직급
구민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연구소(원)	구내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아시아개발연구소	02-880-5622		mgkoo@snu.ac.kr

○ 주요 참여 인력

성명	소속	직급	이메일
김주형	사회과학대학	부교수	joohyung@snu.ac.kr
천해성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chun815@snu.ac.kr
최규빈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gbchoi@snu.ac.kr
박상민	의과대학	교수	fmpark1@snu.ac.kr
홍석철	사회과학대학	교수	sokchul.hong@snu.ac.kr
김선영	보건대학원	부교수	sykim22@snu.ac.kr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교수	bramhs@snu.ac.kr

3. 사업 성과

□ 사업 성과

- 현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김주형 교수)
 - 세계 각국, 지역, 행위자들 간 상호의존성은 비가역적인 단계에 놓여있음.
 - 동시에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조와 조건에 대한 질문은 더욱 절실해짐.
 - 최대주의(모두스 비벤디)와 최소주의(하버마스 이론)의 절충적 입장에서, 다양한 제도적 실험에 참고하고 다층적 행위자들의 활동을 판단할 수 있는 전거 마련이 필요함.
 - 평화적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에 대한 논의
 - 모두스 비벤디는 갈등 상황에서 평화와 공존의 정착을 위한 잠정적 협정이나 일시적 합의를 의미함.
 - 대표적 이론가로서 John Gray, John Holton, David McCabe 등, 이들 관점에서 기성 이론에 대한 문제의식은, 다원성과 다양성, 좁히기 힘든 차이와 갈등으로 점

철된 오늘의 정치현실을 무시한다는 것임.

- 이를 대신해, 정치에 대한 건강한 회의주의와 현실주의를 주장하고 잠정적 협상을 통한 평화가 비록 항구적이지 못할지라도, 고도의 갈등 상황에서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목표임을 강조함.
- 하지만 모두스 비벤디에 의한 평화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소극적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투영 등으로 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함.

- 하버마스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론

- 전 지구적 헌정질서(global constitutionalism)의 수립을 강조함.
- 다층적 연방 체계 구축: 확장된 UN은 초국적 단일 행위자로서 국제평화와 인권 문제를 담당하고, 지역 레짐을 중심으로 복수의 행위자들이 지구적 내정을 담당함.
- 즉, 국내 차원의 입헌민주주의의 이상과 원리를 국제질서에 투영하는 것임. “민주주의의 초국화”.
- 하지만, 지구화의 도전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필요성을 ‘민주적’ 대응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비판이 제기됨.

- 모두스 비벤디의 규범성 결핍, 하버마스의 까다로운 전제조건과 요구사항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현실 적용에 대한 난제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임.

○ 북한 발전권 증진에 대한 제언 (천해성 연구원)

- 발전권이 의미하는 발전은 경제적 발전에서 나아가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발전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함.
- 1966년 유엔총회에서의 언급 이후 각종 국제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 내 개도국과 빈곤국이 처한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확립을 필요로 발전권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됨.
- 발전권은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발전이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설정된 여러 개별 목표들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기본적 권리로서 발전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발전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정치, 경제, 이념적 차이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발전권의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 북한은 UN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비교적인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하였음.
 - UN 기구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채택하고 이후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 물론 북한의 발전권 주장은 기본적으로 제재 해제라고 하는 자신들의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조치라는 관점에서 비핵화 및 평화를 견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개발 구상 등과 함께 검토하여 향후 효과적인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개발권 등의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도 수용하는 SDGs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 방안이 될 것임.
-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발전권을 매개로 SDGs 관련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할 가능성을 모색함.

○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의 역할 고찰 (최규빈 연구원)

- 군사적 분쟁이나 장기화된 갈등을 겪는 당사자가 물리적 폭력을 중단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적임.
- 문제는 분쟁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어렵게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갈등은 재발하며 합의의 파기나 역진이 일어나 항구적 평화가 구축되지 못하는 데 있음.
- 따라서 평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평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평화협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모색 과정으로서 7·4남북공동성명의 한계를 조명하고자 함.
 - 첫째, 합의의 성격 면에서 7.4남북공동성명은 일종의 공동선언으로 쌍방의 규범적 의미가 내포되는 조약보다 이행의 구속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음.
 - 둘째, 국제사회 및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과 불신은 7.4남북공동성명의 이행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음.
 - 셋째, 남북한 간의 합의 이행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이견은 실질적인 결과 도출에 실패한 원인이 되었음.
 - 넷째, 박정희 대통령이 합의 과정에서 보인 소극적 태도 역시 공동선언의 이행 및 남북 간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이러한 차원에서 7.4남북공동성명은 오늘날 평화협정 발전에 시사점을 안기며, 그것은 평화협정의 체결과 좌초가 반복되는 지난한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협상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장기 내전의 종식과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과 노력이 있을 때, 상호 신뢰 및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안정적 체제와 최고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수반될 때 분쟁의 평화적 전환 가능성이 큼을 시사함.

○ 지속적 평화를 위한 남북 간 수산업 협력 방안 (구민교 교수)

- 최근 들어 아시아-태평양 권역과 아시아-인도양 권역을 포괄하는 인도-태평양 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해양인식의 공간적 확장은 행위자의 다양화와 이슈영역의 다변화를 의미함.
 - 행위자 다양화 측면: 미중 간 해양패권 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일본, 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주요 해양국가는 물론 인도와 호주까지 중요 참여자로 부상함.
 - 이슈 다양화 측면: 해군력의 물리적 확장 경쟁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규범경쟁의 양상을 보임.
- 이러한 외연적 상황은 남북 간 해양협력 방안에 한계와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수산업 분야는 다른 해양분야에 비해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유망 협력 분야임.
 - 북한은 고질적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수산물 어획량과 양식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으나, 워낙 기술이 낙후되고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획기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는 상황임.
 - 남한의 어족자원 탐지기술, 양식기술, 어업 인프라 구축 및 양식자재와 수산물 가공기술 등을 북에 전수함으로써 상생의 기회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분야임.
- 현실적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NLL 이슈, 중국 불법조업/해상민병대, 집단주의적 북한 수산업법 체계 등의 장애가 존재함.
- 따라서 수산업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상호 법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시장화 전략,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이 북한의 어업 및 수산업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남북어로협력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제한을 전제로 우리 어선이 입어하는 방안임.

○ 코로나시대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향 모색 (박상민 교수)

- 건강안보, 생명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위한 협력수요가 증가함.
 - 건강에 안보의 관점이 결합된 건강안보는 개념은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었으나,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건강안보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됨.
 - 북한으로서도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로 군사적 안보와 함께 방역과 건강안보는 체제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우선순위임.
 - UN 및 미국의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 코로나 국경봉쇄로 비공식 시장교류 또한 막힌 북한으로서는 의료에 대한 인도적 지원 수요가 급증했을 것으로 판단됨.

- 질병의 전파에 국경이 무의미함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건강과 안전은 세계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적 개념에서 접근해야 함을 코로나 19를 통해 재확인하였음.
 - 또한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건강협력이 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글로벌펀드(Global Fund)나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일부 다자기구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북한의 보건의료 재정구조는 외부 국제사회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음.
 - 현재 대북제재의 현실적 어려움이 놓인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가능한 조직을 경유하여 어떠한 재원을 활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세계백신면역연합과 달리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여국이 특정 국가를 지정하여 특정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다자성양자원조(Multi-Bi Aid)의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지원이 가능함.
 - 남북이 직접 협의가 가능하다면 세계보건기구가 참여하고 있는 코백스퍼실리티를 통해 북측에 코로나19백신을 전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모든 국가에 충분하고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세계백신면역연합과 세계보건기구, 감염병혁신연합(CEPI)은 코백스퍼실리티라는 백신 공급기구를 설립하였으며, 취약국에 속하는 북한도 코백스를 통해 코로나19백신의 구매와 조달을 수행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의약품과 물품을 지원받는 것을 넘어 자국 내 의료물품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술교류나 공동 R&D 사업의 경우에는 UN 제재와 미국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제법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와 대비를 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내전의 생애초기 노출이 선호와 태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분석 (홍석철 교수)
- 최근 경제학 연구들은 생애초기(태아기와 영유아기)의 부정적 경험(예: 질병, 환경문제, 내전 등)이 장기적으로 개인의 인적자본(교육, 성인기 소득 등)축적과 생애주기 건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혀냄.
 - 실제로 20세기 중반 이후 최근까지 많은 국가(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크고 작은 내전들을 경험해왔고, 이런 국가에서 태어나 생애초기를 보낸 아이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Trauma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실증연구를 통해 생애초기 내전 경험의 장기적인 효과의 크기로 경로를 정량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4-8세에 내전 경험은 성인기의 위험 회피적 성향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어린시절 내전을 경험한 것을 주요한 설명변수로 하고 성인기의 위험 회피적 성향

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 이 연구를 통해 생애초기 조건을 중요성을 지지하는 정량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내전과 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특히 한국전쟁을 경험한 대한민국과 북한 간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본 연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협력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취약국 및 분쟁지역 보건의료체계 강화 방안 모색 (김선영 교수)

- 2010년대 이래 취약국 및 분쟁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systems thinking”의 관점에 기반하여 전체 보건의료체계 차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접근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실정임.
 - 2009년에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 ‘Systems Thinking for Health Systems Strengthening’은 ‘Systems Thinking’ 접근법의 역할을 보건의료체계의 복잡성을 해석한 후 이에 대한 이해를 건강과 건강형평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중재(intervention)의 계획과 평가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 즉, 어떤 문제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체계의 일부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해결방안이 보건의료체계의 모든 하위체계에 걸쳐 적용되도록 하는 접근법임.
- 본 연구는 취약국 및 분쟁지역의 주민 건강 및 보건의료체계 관련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취약분쟁국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대표적 취약국인 예멘을 대상으로 Systems Thinking 접근법에 기반하여 보건의료체계 회복탄력성 강화 방안을 구상·제안하고자 함.
 - 예멘의 경우 WHO 보건의료체계 구성 요소인 리더십과 거버넌스, 재정, 서비스 전달, 필수약품과 기술, 보건의료인력의 모든 면에서 열악한 실태를 보임.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각 문제점 및 이들 간의 상호 관계를 예멘의 정치사회경제적 맥락 하에서 심도있게 이해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예멘 보건정책 의사결정자, 보건인력 및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체계 강화의 장애·촉진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조사와 양적조사를 설계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WHO의 Systems Thinking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총 10단계의 구체적인 중재 방안을 설계하였음. (추후 코로나 사태 완화 시 현장조사를 통한 적용 방안 구체화 예정)
- 무엇보다도, 취약국 및 분쟁국에서도 특정 질병 대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직적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보다 보건의료체계 거버넌스 차원의 수평적(시스템적) 접근이 더욱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사례 중심의 실증적 연구설계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System Thinking 접근법을 통한 구체적 중재 목표와 단계 설정 필요성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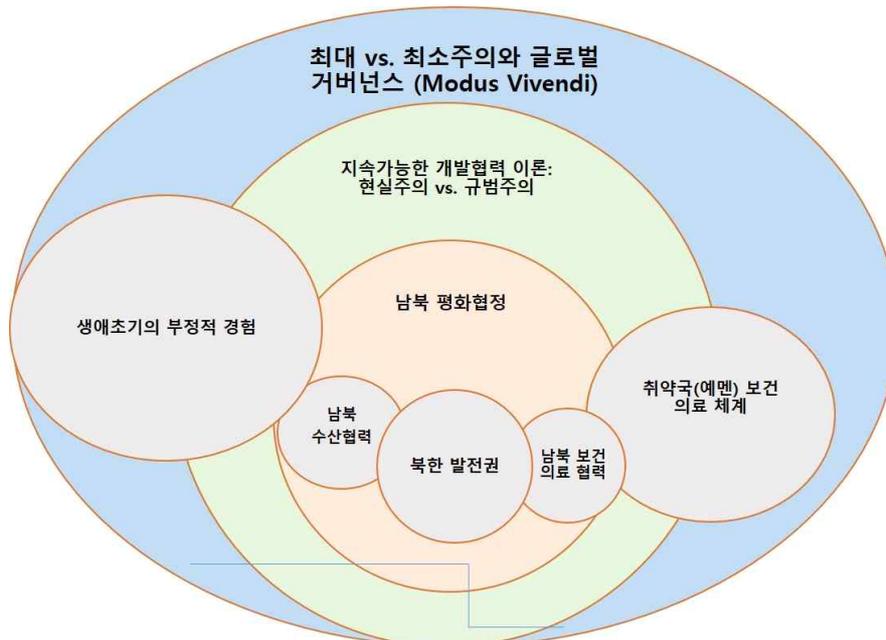
○ 현실주의적 접근과 규범주의적 접근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속적 평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발전방향 모색 (김범수 교수)

- 전 세계에 만연한 가난과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이 동의하면서도, 이러한 의견 일치는 때때로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들어갈 경우 나라들 사이에 또는 개인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 차이가 나타남.
- 이 문제의 일차적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난 해결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공통의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데 있으며, 더 들어가면 나라들마다 또는 개인들마다 선호하는 가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임.
 - 나라마다 또는 개인마다 어떠한 국제개발협력이 “좋은”, 또는 “나쁜” 국제개발협력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가난 해결 방안과 국제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나타남.
-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러한 견해차를 논하는 다양한 현실주의적 입장들을 살펴보며 윤리적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의 규범적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현실적 접근: 신말더스주의(neo-Malthusianism),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현실주의(realism), 자유주의(liberalism) 등이며 이들 간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국제개발협력의 규범적 당위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짐.
 -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당위적 접근: 공리주의적 범세계주의, 도덕적 범세계주의, 제도주의적 범세계주의(utilitarian, moral, and institutional cosmopolitanism)가 있음.
 - 공리주의적 범세계주의: 도덕 원칙은 우리에게 비슷한 정도로 나쁜 일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이를 막을 것을 요구함.
 - 도덕적 범세계주의: 권리(특히 생존권)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리의 실현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부여하며, 권리의 실현과 향유는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제도주의적 범세계주의: 전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적 교류와 상호의존의 증가로 도덕성에 대한 논의가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함.
-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가난과 기아의 문제를 규범주의적 관점의 발전과 확산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리고 그 발전은 윤리적으로 좋은 국제개발협력과 나쁜 국제개발협력을 분간해내는 데,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윤리적으로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가에 달려있음.

□ 관련분야 기여도

- 최초 연구 개시 단계에서는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이라는 틀 속에 다양한 각론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연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함.
- 각 각론별 연구를 진행하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동심원 개념도를 도출하였고, 이는 향후 본 연구의 다음 단계 사업 진행뿐만 아니라 타 연구사업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연구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최대주의 대 최소주의” 간의 논쟁 속에서 도출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본 연구과제의 거시적 틀을 제시함.
- 그 하위 단계로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이론 개발 분야에 “생애초기의 부정적 경험”, “취약국 보건 의료 체계”, “남북관계” 등의 각론을 수렴할 수 있음.
- 특히 “남북평화협정”의 틀 속에 “남북 수산협력”, “북한의 발전권”, “남북 보건 의료 협력” 등의 분야를 분석적인 관점에서 논할 수 있음.



4. 예산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현재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주제의 시의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뿐만 아니라 자문단의 종합적인 의견은 그 시간적 범위를 더 넓게 잡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음.
- 뿐만 아니라 본 주제는 남북협력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이슈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주제가 되었음.

○ 사업의 효율성

- 본 연구사업의 핵심은 현장 연구(field research)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필드워크를 전혀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의 진행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상회의,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자 인터뷰를 수행하고 서베이를 실시하는 등 제한된 상황에 맞추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음.

○ 사업의 영향력

- 일견 이질적인 각론으로 구성된 연구 분야의 통합이 가장 중요한 성과로 판단되며, 향후 후속 연구의 벤치마킹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업의 발전가능성

- 본 연구사업은 그 성격상 단년도에 그 결과를 평가하기 어려운바, 향후 지속적인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며, 한반도와 그 이권을 아우르는 연구의 범위를 고려할 때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판단됨.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초기에는 비대면 상황에서 연구의 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음.
- 당분간 비대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향후 계획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나, 단행본 출판 등 참여 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음.

6. 성과 관련 지표

대표 사업 실적

- 중간 및 최종 결과물의 세미나 발표 외에 특별한 사업 실적은 아직 없으며, 향후 각 연구진이 학술지 논문, 단행본 등의 형식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성과 자율 지표

- 해당사항 없음.